

중고품 및 재제조에 대한 정의와 기준 마련 시급

자율안전확인제도와 사무기기 시장의 변화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글 / 한국후지제록스(주) 마케팅실 최재봉 팀장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통제와 규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각종 법률과 규정 등과 같이 국가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제가 있는가 하면, 이를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기도 한다.

우리정부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 수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상부의 지시와 업적만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래 전기제품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2009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제도가 화두이다.

그 동안 전기제품은 안전인증제도라는 강제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없고 강제로 규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조업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대외적으로 유리한 무역조건의 확보 등 기업의 경영과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사전에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모터와 히터 등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강제인증대상으로하고 A/V, 전자제품 등 위해성이 현저하게 낮은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품목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5월 9일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을 환영하는 품목과, 계속적으로 강제인증 유지를 원하는 품목쪽 주장으로 의견이 나뉘어졌다. 즉, 연구결과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품목간의 활발한 의견공방이 있었다.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복사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복사기업계에는 현재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업계가 받을 수 있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의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사기는 표면적으로 안전사고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온의 히터장치, 고압의 전기장치, 각종 모터 등 구동장치와 같이 항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품목이다. 더욱이 중고전기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중고복사기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에 지정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사기 시장과 업계의 현안

현재 국내 복사기 시장은 연 판매대수가 8만 5천여 대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시장의 정체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복사기 시장에서 전체시장에서 25%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입중고복사기는 환경과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입의 70%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어 건전한 시장을 교란하는 현실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개정법에서는 이를 방지할 최소한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량한 기업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구나 관련법의 허점과 사후관리의 부실로 이미 특정지역에서는 중고복사기가 전체 유통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발전과 시장질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2006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과 업계의 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행한 재제조산업의 육성정책은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정당한 정책이므로 일단 시행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 결과가 잘못될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사기업계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하여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